

전기요금, 10%이상 인상은 안된다!

전기위원회, 실질적인 인상폭 커져 ... 물가안정 고려해 4% 내외 고수

7월17일 열린 전기위원회에서 한국전력이 제출한 평균 10.7%의 전기료 인상안이 부결됐다.

한국전력은 6월8일 평균 13.1%의 전기료 인상안이 반려되자 7월 둘째주 10.7%의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다.

10.7%는 요금 인상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6.1%는 연료비 연동제를 이용해 미수금 형태로 보전받는다는데 내용을 포함했다.

김중호 전기위 사무총장은 “13.1%의 인상안에 대해 인상률이 너무 높고 자체 구조조정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수정안에 견해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실질적인 인상폭이 더 커졌다”고 부결 이유를 설명했다.

위원회의 부결 결정에 따라 지경부가 수정안을 반려하면 한국전력은 7월19일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전기요금 인상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10.7%의 인상안에 대해 물가안정 등을 고려할 때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밝혀왔다.

전기요금 인상 억제로 적자가 누적된 한국전력은 원가 상승 등을 반영한 2자리수 인상률을 고집해 왔지만 정부는 물가와 서민생활 안정을 고려해 4% 내외가 적당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반려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 이기표 한국전력 비상임이사는 “하나의 카드일 수는 있지만 공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가능한 카드를 모두 쓸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정부에 대해 “인상안을 계속 거부하지만 말고 정부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인상률을 한국전력에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전기요금 토론 전용 트위터 계정을 7월16일 개설했다.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해 계정을 개설했다”며 “계정을 통해 다양한 전기절약 실천사례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7/17>